

한국 금융정책의 이해

김 용 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1. 한국 금융의 현주소

1) 한국 금융의 발전경과

우리나라 금융은 역사적으로 금융자원을 정부가 통제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순 자금 중개 기능에 중점을 두고 성장했다. 개발연대에 금융기관은 경제개발과 산업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고 지원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국가가 금리와 신용규모를 직접 규제하였으며, 제한된 자금을 국가전략산업에 집중 배분하는 것이 금융의 주요 기능이었다. 80-90년대에 들어 시중은행을 민영화하고 금리를 자유화하는 등 금융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나, 여전히 정부 소유은행을 중심으로 신용을 공급하는 개발금융 패러다임은 우리 금융산업을 지배해왔다.

97년 외환위기는 우리 금융산업에 커다란 분기점이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위험과 이에 상응하는 가격에 기반해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이 자리를 잡았다. 금융회사도 금융 자유화와 경영환경 변화의 물결에 적응해야 했다. 과거 금융회사는 정부 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손쉬운 방식의 영업행태에만 안주해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도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과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야하며 위험관리에 실패하면 도산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주주가치의 극대화가 금융회사 경영의 중요한 목표로 등장했으며, 자본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금융회사 경영방식도 크게 변화하였다.

이후 우리 금융시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규모가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질적으로도 크게 발전하였다. 금융시장 발전에 따라 금융안정성도 제고되었다. 몇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며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한 결

과 우리나라 금융은 여타 신흥국에 비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국내 금융기관도 과거에 비해 안정적 자본구조와 건전한 자산구조를 갖추고 있는 등 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위환위기 이전에 비해 9단계나 상승하며 여타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우리 금융산업은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 데도 기여해 왔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부실을 정리하고 기업재무구조 개선에 일조하는 등 실물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도 수행해 왔다.

2) 한국금융의 패러다임 변화

그러나 최근 우리 금융산업은 근본적인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이 변화와 도전은 과거와 달리 금융산업·금융시장·금융소비자 등 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전례없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의 신뢰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경제구조도 변화에 직면해 있다. 우리경제가 성숙경제로 접어들며 성장동인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금융산업의 변화와 혁신도 요구된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각국은 금융포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금융의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의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금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금융포용은 오늘날의 금융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핵심가치로 등장하였다.

가. 금융안정과 신뢰에 대한 요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산업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시장의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며 금융기관과 경제주체에 게 극심한 위협을 야기했으며, 우리에게 금융안정(Finacial Stability)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겸업화·대형화·증권화 추세에 제동이 걸리고 맹목적으로 진행되어 온 금융혁신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각국은 금융혁신을 통해 이루어온 금융 효율성의 편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안정의 다면성을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했다. 과거 금융안정은 주로 개별 금융기관의 안정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만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금융안정은 개별 기관의 건전성은 물론이고 금융시장과 금융 인프라, 이자율·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의 안정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금융안정의 다면성은 미시적 감독과 거시적 감독이 모두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균형있게 달성하는 것이 금융정책의 중요한 정책목표이다.

국내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금융안정과 신뢰에 대한 요청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에

대해 부정적 인식과 오해가 많은 시기도 없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유출사태, 동양사태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안정과 신뢰의 중요성은 여타 어느 나라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삼고 있어 금융의 신뢰상실은 우리금융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외 금융여건의 변화와 신뢰에 대한 요청으로 인해 금융안정의 달성은 우리 금융이 직면한 시대적 사명이라 하겠다.

나. 경제구조와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 경제의 성장여건과 금융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경제구조 측면에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이 쉽지 않은 성숙경제로 진입하고 있으며, 빠르게 진행중인 고령화 역시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동인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요소투입 중심의 성장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산업간 융합이 경제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한국 금융산업도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여전히 과거행태에 안주하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에 혁신(Finacial Innovation)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금융정책의 두 번째 정책과제이다. 이는 금융산업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금융은 과거와 달리 단순자금 중개 중심의 양적성장에서 벗어나,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금융업에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국가경제적 차원에서도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성장판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새로운 발전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을 담고 있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3.11월 마련하였다. 이 방안은 우리 금융산업의 목표로 향후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양적 목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산업의 질적 내실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동 방안은 양적 성장과 질적 내실화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과 혁신(Competition), 금융과 실물의 융합(Convergence), 국민재산의 안정적 보호(Consumer-Protection)라는 3C를 핵심미션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공허한 비전제시 대신 실행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과거와 달리 이상에만 그치는 과제를 지양하고 국내경제 여건, 우리 금융산업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냉철한 진단을 기반으로 실현가능한 과제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 따뜻한 금융과 금융포용

점증하는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은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향해 발전해 왔다. 규모면에서도 세계 각국의 금융시스템은 실물경제보다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자산이 실물자산의

성장속도를 앞서는 금융심화는 우리경제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이처럼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모두가 금융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금융정책의 주요한 가치가 되었다. 금융의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을 뜻하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 우리 금융정책의 세 번째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금융(finance)의 어원은 목표를 의미하는 라틴어 finis에서 유래했다. 넓은 의미의 금융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의 필요조건이라면 기회로서의 금융도 보편성과 접근성을 지녀야 한다. 모두에게 골고루 금융기회가 주어지고, 금융시장의 발전의 혜택을 금융소의 계층없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바로 금융포용이다.

금융포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금융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이다. 이는 모두에게 단순히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주어지는 물리적·외형적 접근성 뿐만 아니라, 서민에 대한 적합한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누구나 공정한 가격으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실질적 접근성의 확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두 번째는 금융이 서민의 자활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따뜻한 금융은 과도한 이윤추구와 악탈적 대출에서 벗어나 불확실성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튼튼한 경제 하부구조와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한국 금융정책의 주요과제

1) 금융안정

금융안정은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제도(인프라)의 안정으로 정의되며, 이는 미시적·거시적 차원이 복합되어 있는 다면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거시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들의 구조조정 문제도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중대한 요인이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지속하였던 양적완화 기조대신 출구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어 함께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주요한 문제이다.

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① 가계부채 문제의 중요성

가계부채는 가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융부채를 의미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차입자인

가계는 물론 자금제공자인 금융기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적 위험요인이다.

먼저,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건전성과 후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가계의 현금흐름과 실물자산 가치가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누적된 가계부채는 경기가 침체기에 진입할 경우 가계의 소비여력의 저하로 이어져 우리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가계가 보유한 실물자산도 변동성 확대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가계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할 경우 담보자산의 급매가 증가하여 주택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기관이 디레버리징 과정에 진입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계 차입자를 중심으로 차입축소가 일어날 경우 주택의 순공급이 증가하며 주택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나아가 가계의 신용불량으로 이어져 가계의 건전성과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가계부채가 과도하여 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연체가 증가하고 대출 회수가 감소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악화된다. 이러한 문제가 단기적·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완충자본 등을 통해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로 연결되고 중국에는 금융시장과 경제전체로 전이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는 중요하다. 향후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이 증가할 경우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국내경제의 자산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자산가격의 급락은 다시 가계부문의 재무상태를 악화시켜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게 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절반은 주거용 부동산 구입과 연관되어 있으며,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전체의 67.8%를 차지하고 있어 가계건전성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위험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② 한국 가계부채의 위험성

우리경제의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14년 현재 1,025조원을 기록하면서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돌입하였다. '04년말 494조원을 기록한 이후 약 10년 만에 가계부채 규모가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대출이 481조원으로 가계대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338조원으로 아직 은행권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은행권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한편,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2013년 현재 85.6%로 OECD 국가 평균인 75.4%를 상회하고 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 139%에서 2013년 160.7%로 증가하였다. 우리경제의 가계부채가 경제성장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 가계부채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총량 측면의 문제가 크게 부각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11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마련 이후 부채총량의 증가속도는 과거에 비해 둔화되고 있으며 최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추진 이후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등 대출 구조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안정적이며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도 현재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다소 우려스럽다. 첫째, 가계의 건전성 측면에서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성장·가계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소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둘째,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1·2분위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및 원리금상환비율 증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도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아직 건전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영업의 특성상 경제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영업의 비중이 높고,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편이다. 셋째, 최근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로 인한 금융불안 가능성도 증대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느슨한 담보평가 기준 등으로 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다 실제 위험은 더욱 클 수 있다.

③ 가계부채 정책대응 및 향후 정책방향

정부는 가계부채의 급증세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증가속도, 대출구조, 가계대출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금융위험의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11년에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대응방향과 정책수단을 마련했다. '12년에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통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속도 관리 및 건전화 방안을 추진했다. '13년에는 국민행복기금,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 대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IMF도 향후 금리상승 및 경제성장률 둔화 등 거시경제의 충격 발생을 가정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우리경제의 가계부채가 관리가능(manageable)할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가계의 건전성 측면에서 여전히 가계의 상환능력이 취약하고 저소득층 등 부문별 리스크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시작하였다. 우선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5%p 이하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단순히 부채의 총량을 관리하던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여 가계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가계건전성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지난 2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마련하였다. 동 대책에서는 앞서 설명한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포함하였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재조정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우리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그리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다. 실물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미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과거와 같이 빠른 성장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양적측면에서 가계부채를 경제성장 속도에 맞춰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질적 측면에서 가계대출의 구조를 금리와 만기 위험으로부터 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리스크가 큰 취약 차주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부문의 안정 대책과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주 택시장의 안정 기조 유지를 위한 실물부문의 대책들이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유독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과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비결 중 하나가 가계부문의 높은 건전성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계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중추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가 기도 하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중요한 이유이다.

나.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① 의의 및 발전경과

기업 구조조정은 생산적 복원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 원천을 찾기 위한 기업의 총체적 혁신과정으로 정의된다. 기업 구조조정은 본래 기업 경쟁력 복원이라는 실물경제적 문제에 해당하지만,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는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은 해당 기업에 금융을 공급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본 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비중이 커진 오늘날에도 기업 구조조정은 여전히 금융안정의 중요한 과제이다. 동양그룹 사태에서도 목격했듯이 적기 구조조정의 실패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졌다. 이처럼 금융발전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은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정책의 핵심 과제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은 주체와 시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업 부실 발생이

후 사후 교정적·복원적 관점에서 기업내부 자원의 정리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후적 구조조정이다. 채권 금융회사와의 자율협약,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법원주도의 회생절차를 통한 복원이 사후적 구조조정의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기업이 부실화 되기 이전에 수행되는 예방적 성격의 사전적 구조조정도 존재한다. 기업자체적으로, 또는 시장에 의해 행해지는 구조조정, 주채권은행에 의한 대기업그룹 관리 등이 사전적 구조조정에 속한다. 통상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좁은 의미로 부실기업의 처리를 의미하는 사후적 구조조정으로만 이해되어 왔으나, 광의의 의미에서는 사전적 구조조정까지 그 개념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기업구조 조정은 사후적 방식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97년 외환위기 이후인데 이때의 대규모 기업부실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정립하는 계기였다. 당시 대우그룹 등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체결한 부도 유예협약과 기업구조조정협약은 채권단이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 방식의 모태가 되었다. 채권단 자율협약의 경험과 간접금융 중심의 금융시장 구조는 이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이라는 은행 중심의 워크아웃 체계를 형성한다. 사후적 구조조정의 또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법원주도의 회생절차 관련제도도 간소화되었다. 기존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 채무자 회생법 등 복잡한 도산법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였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주채무계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전적 기업 구조조정 등 예방적 조치도 강화되었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은행채무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사전적·재무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외환위기 이후부터 '01년까지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을 금융기관 신용공여기준 상위 60개 대기업그룹으로 관리하였다. 이후 주채무계열 기업의 범위를 단순한 서열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시장친화적·실질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즉,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 잔액대비 0.1% 이상인 계열 기업군을 주채무계열 범위로 지정하여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05년에는 주채무계열 중 재무구조가 취약하다고 판명된 기업에게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노력해 왔다.

② 구조조정 환경의 변화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자본시장의 발달과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존 채권자 중심·은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전략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자본시장의 발달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기업들은 은행여신 등 간접금융 비중을 크게 줄였으며, 자본시장의 발달로 인해 자금 조달 창구가 다원화되고 회사채·CP 등 직접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방식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기업 자금조달이 시장성 차입금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일부 부실한 기업집단이 현행 주채무계열 범위에서 빠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은행채무에 기반한 주채무계열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자본시장을 활용한 시장 중심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계경제 환경도 기업의 구조조정 여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8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금융완화 기조는 종언을 고하였으며,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경제회복을 위해 금융업 대신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내세우며 그동안 지속되어 온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차이메리카 중심의 올드노멀 구도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장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뉴노멀(New-Normal)로 경제방향이 전환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세계 각국의 산업구조의 변화도 수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일부 산업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며 우리 기업의 부실도 점차 누적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13년 중 STX그룹이 부실화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부실의 확대와 위협의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구조조정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와 같이 이미 현재화된 부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만 추진되던 사후적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내 잠재된 기업부실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은행중심의 구조조정 체계에 대한 보완과 함께 자본시장의 공시 등 시장규율을 활용한 예방적 구조조정 기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③ 선제적 구조조정 전략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둘러싼 환경 변화 및 시대적 요구를 감안하여 '13년 11월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체제 마련·정착을 위한 「기업부실 사전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제도개선 방안은 주채무계열제도·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제도를 '12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발달되어온 공시제도 등 자본시장 규율을 활용하여 주채무계열 제도의 단순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자 했다. 즉, 그간 제기된 사전적 구조조정제도의 제도개선과 동시에 자본시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금융기관·부실기업 등 관련 참여자들의 인식 및 관행 등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질적 차원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는 제재수단과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구조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그동안 주채무계열이 재무구조 개선약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미비했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만기에 도달한 여신을 회수하는 등 기존 제재에 더하여 금리인상, 경영진 교체권고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였다. 또한 주채무계열 제도보다 더욱 예방적 성격이 강한 관리대상 계열 제도를 신설하였다. 아직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해 재무구조 개선 약정체결 대상 기업은 아니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관리

대상 계열'로 지정하여 보다 선제적 감독체계를 갖춘 것이다. 동시에 기존 주채무계열 기업을 선별할 때 취약한 기업이 적시에 선별되도록 비채무항목을 계량화하고,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재무구조평가방식도 보완하였다.

자본시장의 공시제도를 활용하여 기업부실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사전적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장규율의 기반이 되는 공시제도를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한 것이다. 부실기업이 시장성 차입금을 통해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주채무계열을 이탈하여 재무감독을 받지 않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이 현실을 반영하도록 확대하는 동시에,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주채무계열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총차입금과 시장성 차입금의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부실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을 거부하던 문제에 대해서는 약정 체결 거부 사실까지 공시하여 해당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 등 시장규율에 기반한 간접적 감시체계가 작동하도록 개선하였다.

제도운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중인 그룹은 약정 체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기존의 금융기관이 채권회수 방식 위주로 구조조정에 임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 등 계열의 금융 지원요청에 은행이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약정에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채권은행간의 협업도 강화하였다. 자본시장의 발전 등 직접금융의 확대에 따라 은행의 기업여신 비중이 축소되고 있어 은행 단독으로 대기업 그룹의 구조조정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주채권은행외의 기타 채권은행도 기업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채권은행간의 협업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을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양적완화로 한계기업들의 시장퇴출이 이연된 상황에서, '13년에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용등급 강등 기업수가 최대를 기록하였다. 향후에도 기업의 추가부실 우려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사전적 구조조정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는 동시에, 건강한 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은 적극 지원하되 정상화가 곤란한 기업은 신속히 정리'해 나가고자 한다.

다. 글로벌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도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는 급속한 경기위축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미룬 채 양적완화로 팽창된 글로벌 유동성이 경제의 거품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양적완화 정책으로 확대된 유동성 공급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

서 주식, 채권, 주택시장 등에서 버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저점대비 2014년 6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상승률은 148%에 달하며 신흥국 주가상승률도 131%나 되어 자산가치 버블에 대한 우려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의 출구전략도 주요 변수이다. 미 연준은 그동안의 초저금리 기조에서 탈피하여 금리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유형의 변동성 확대에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즉, 인위적인 금리 상승 억제, 투자 단기화, 위험선호 증가 등 대규모 양적완화 지속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심화된 상황에서 출구전략 시행 후 반전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출구전략 수행시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 반전을 감안하여 저금리 기조 하에서 이루어진 과다차입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경제위기 차단을 위해 외화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거시경제 펀더멘탈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과 중국에서도 주목할 만한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가 진행중이다. 일본은 장기불황의 극복을 위하여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 및 재정정책, 투자활성화 등 성장전략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인 아베노믹스를 추진중이다. 일본경제는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지향하는 인플레이 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금리 상승 등을 통해 일본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이자부담, 일본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중국경제의 구조 전환을 추진중이다. 중국 경제가 수출에서 내수 중심 경제로의 자연스러운 이행이 가능할지, 향후 전반적인 금리상승 기조 속에 신용 및 부동산 시장 과열, 재정 위험 등을 극복하고 연착륙할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2) 금융혁신

금융안정의 기반위에 금융정책이 추진해야할 두 번째 과제는 금융혁신이다. 우리경제도 성숙경제에 접어들어 경제여건과 성장동인이 급변하는 가운데, 금융산업은 과거 양적성장 시대의 관행에만 안주하고 있어 우리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는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실물경제와의 금융의 융합을 통한 금융혁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① 현황 및 문제점

금융혁신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과제는 금융규제의 개혁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금융규제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편이었다.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세계 각국의 금융산업 겸업화,

대형화, 자율화 기조와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규제가 과도하여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 등 유효경쟁을 가로막아 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이 비일관적이고 불투명하여 규제 준수비용이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나친 규제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금융규제 개혁에 착수하였다. 과거에도 금융규제 개혁작업은 추진되었으나, 금융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기존의 규제 개혁 작업이 법령상 규제에 한정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법령상,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감독 당국에 의한 행정지도, 구두지도 등 비명시적으로 금융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기존 규제개혁이 법령상의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오히려 많은 행정지도를 양산하고 정책집행기관의 불합리한 숨은규제는 개혁이 미루어진 채로 지속되어 온 것이다.

② 규제개혁의 방향

규제개혁의 접근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금융환경 변화와 수요변화에 따라 금융규제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빅뱅적(Top-Down)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에 중점을 두고 세부규제들을 개선하는 현장중심적(Bottom-up) 접근법이다. 빅뱅적 접근법은 전면적인 규제개혁으로 인해 규제개혁의 효과가 높고, 현재 규제체계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크고, 규제개혁 후에도 전면적 규제개편으로 인해 금융수요자의 준수비용이 높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바탕을 둔 개혁의 구체적 적실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개혁 작업은 현장중심적 접근론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현장중심적 접근법은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피규제자들이 체감하는 불편사항에 충실하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개선 사항의 디테일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낮고 행정지도, 구두지도 등 금융감독상 숨은규제가 금융현장에서 지속되어 온 관행을 감안하여 현장 중심적인 규제개혁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만드는 것을 지향하였다.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하는 규제완화(de-regulation)가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낡은 규제는 현실화하는 좋은 규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좋은 규제는 규제의 목적성, 비례성, 효율성을 지니고 있는 규제를 뜻한다. 즉, 금융안정 달성이라는 금융규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오늘날의 금융현실에 맞는 범위내에서 과도하지 않게 적정 수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 금융수요자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의 준수비용이 낮아 효율적이어야 좋은 규제라 할 수 있다.

둘째, 금융업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동안 우리 금융산업은 자

생적인 경쟁력을 기르지 못한 채 국내시장에서의 출혈경쟁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업권은 각자의 금융영역을 지키기 위해 업권간 팽파먹기식 규제를 지키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규제는 업권간의 출혈경쟁적 싸움에서 벗어나 금융업 전체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우리 금융회사가 해외시장 등 새로운 수요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 100세 시대의 도래에도 대비해 새롭게 등장하는 연금, 노후대비, 의료비보험 등의 금융수요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업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셋째, 금융현장에서 금융규제 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의 체감도는 크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법령규제 개선에만 치우쳐 있었고,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규제개혁 작업은 기존의 단편적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지도와 감독관행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보여주기식의 일회성 규제 개혁 대신, 상시적으로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하였다. 한편, 규제개혁에 따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의 발생에도 대비해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였다. 상시적 규제관리를 통해 앞으로도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금융 규제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나. 실물경제에 대한 창의금융

① 창의금융의 의미

금융혁신을 위한 두 번째 정책과제는 창의금융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였다. 창조경제는 경제주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하여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러한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손쉽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할 때 구현할 수 있다. 금융의 본질을 실물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원활히 융통하는 것으로 본다면, 창의금융은 창조경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고 다양한 산업간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와 세계경제의 성장기반은 이미 노동과 자본에서 지식과 정보를 넘어 창의성과 상상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반면,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우리 금융산업은 아직 요소 투입 성장기의 행태에 여전히 안주하고 있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등 모험자본의 역할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이지만 국내 민간자본은 리스크 회피경향으로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창업초기에는 엔젤투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나 국내 엔젤시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금융기관도 창의금융에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민간투자자금이 미미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주된 자금 조달처인 은행도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대출 관행만 보이고 있다. 비록 외환위기 이후 신용대출이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부동산 등 물적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등 아시아의 금융기관들은 이미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 기반 대출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금융의 보수적인 금융 관행을 혁신하여 창조경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금융산업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특히, 기업이 창업, 성장, 재도전하는 과정에서 민간자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책금융은 선도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여 민간자금이 창업·벤처기업 등 창조경제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또한, 전문성 부족과 높은 리스크로 인해 무형자산에 대한 자금지원에 소극적이던 은행도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② 창의금융을 위한 정책과제

먼저, 정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금융 정책을 추진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장사다리 펀드이다. 성장사다리펀드는 시장 자생적으로는 지원되기 힘든 창업초기·벤처캐피탈의 영역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유기적인 성장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또한 성장사다리펀드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후순위로 수익을 분배받고, 우수 운영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10월 성장사다리펀드 제1호 펀드인 스타트업 펀드가 성공적으로 출시되었으며, 2014년 6월 현재 재기지원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29개 펀드(약 2.4조원)가 결성되어 운용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창업 초기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 코넥스(KONEX) 시장을 개장하였다. 코넥스 시장은 성장가능성은 크지만 기존의 주식시장인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하기에는 규모 등이 작은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전문적으로 상장·거래하는 시장이다. 2014년 6월말 현재 상장기업 수는 55개사, 시가총액은 약 1.2조원에 달하고 있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중 12개 기업이 486억원 수준의 신규자금조달에 성공하는 등 창업초기 기업에게 획기적인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클라우드펀딩도 창의금융의 대표적 정책이다. 클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이다. 온라인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클라우드펀딩은 이미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제도화된 단계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클라우드 펀딩 제도도입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을 통해 창의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기존의 단순 자금중개 관행에서 벗어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자체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 지식재산금융, 연대보증폐지 등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은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그간 소홀히 평가했던 기업의 기술력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신용평가기관(Tech Credit Bureau) 평가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금융의 확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동산 등 담보가 부족하고 재무상태가 빈약한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은행에게도 기존의 부동산 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무형자산의 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제공하는 지식재산 금융도 최근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은행도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③ 기대효과

창의금융은 우리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금융산업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담보 중심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기술정보에 바탕한 금융이 이루어져 금융 프로세스는 정교화될 것이다. 금융업의 발전과정이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가격을 부여하는 것이었다면 기술금융의 발전은 우리 금융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모험자본의 공급을 확대하여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다. 자본시장과 기업금융

① 현황 및 문제점

금융발전에 따라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여유자금을 장기투자재원으로 공급하여 자금잉여부와 자금부족부의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기업측면에서는 더욱 저렴하고 풍부한 모험자본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게 많은 자금이 공급되어 생산효율이 극대화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촉진된다. 투자자에게 자본시장은 다양한 금융기회를 제공한다. 자본시장 발달과 함께 증권 종류가 다양화·고도화되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자본시장은 그 동안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기업금융의 공급이라

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은 미흡한 편이다. 특히, 최근들어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자본시장의 투자기반이 취약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적 성향은 주식 거래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시장의 자금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상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자본시장 상장이 둔화되는 등 자금수요 기반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자본시장의 자금공급과 수요 감소에 따라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도 위축되고 있다.

자본시장의 주체인 금융회사들의 역량도 정체되며 영업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증권산업의 경우 수익모델이 위탁매매에만 치우쳐 있어 최근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 IB 업무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전문화된 수익구조를 찾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자산운용산업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고성장을 기록했던 자산운용업은 과점적 판매구조와 과도한 규제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사모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로 성장이 가로막혀 있으며, 진취적 모험자본 공급과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하지 못한 상황이다.

②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기업금융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을 '13.12월 마련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금의 공급·수요 확대, 산업의 역량제고, 인프라 정비라는 4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자본시장의 자금공급 및 수요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사모펀드 제도를 개편하여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많은 투자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유망기업이 자본시장에 더욱 활발히 진입하여 양질의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상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한편,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증권사의 역량제고를 위해 대형화 등 M&A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업의 인허가 제도도 개선하였다. 또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회계제도를 개혁하고 신용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먼저,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표적인 과제는 사모펀드 제도의 개편이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에게만 참여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가 존재하여 성장이 지체되었으며 모험자본의 공급기능도 미흡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온 사모펀드 제도를 전문투자형(해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펀드로 단순화하였다. 이는 펀드간의 칸막이가 제거되고 규제체계가 단순화되는 효과가 있어 사모펀드 운용자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모펀드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 등도 간소화하였다. 사모펀드 운용은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만으로 가능하게 개선하였고, 투자 및 채무보증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하였다. 다만, 사모펀드의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 우려를 감안하여 일부 규제는 보완하

였다.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투자는 5억원 이상의 적격투자자에 한하여만 허용하고,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였다.

자본시장의 자금 수요기반의 확충을 위해 기업상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기업상장을 위해 상장심사기준 및 상장유지 기준을 간소화하되,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라는 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균형을 도모했다. 수시공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되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는 공시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코스닥 시장에서 대주주의 단기차익 추구 방지를 위해 보호예수 기간도 단축하였다. 한편, 시장간 이전상장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코넥스-코스닥-코스피로 이어지는 상장 사다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우선 코넥스 시장은 창업초기기업의 자본시장 안착을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운영하고자 한다. 코스닥 이전상장의 특례를 확대하고 전문엔젤 투자자와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인큐베이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창업 투자자금의 회수시장, 기술 창의형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거래소 지배구조를 개편함과 동시에 별도의 상장 질적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의 독자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력만 있으면 경영성과가 부족한 기업이라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상장특례 등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코스피 시장은 상장 및 시장운영 제도들이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금융회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증권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완화는 이를 위한 대표적 과제이다. 증권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NCR 제도는 위탁매매 중심의 국내영업에 기반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위험부담이 필요한 PI 투자, 인수금융 등의 IB 업무 및 해외진출 업무에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NCR 지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즉, 증권사의 순자본규모와 무관하게 NCR 비율이 산정되어 증권회사의 정확한 손실흡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NCR 지표를 총위험액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필요 유지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지표를 개편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증권회사로 하여금 새로운 영업방식과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여 업무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증권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여 건전성 지표로서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3) 금융포용

금융정책의 세 번째 과제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의 지원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이루는 계기였다.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은 G20의 공식의제이기도 했으며,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원칙도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포용의 문제는 신용증가에 따라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계에

대한 신용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와 같은 신용증가는 고신용자, 고소득층, 그리고 수도권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금공급은 저소득·저신용등급의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포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차츰 증가하게 되었다.

가. 금융포용과 정책과제

금융포용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정의된다. 금융포용은 일반적으로 경제주체가 예금,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금융접근성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금융 접근성은 외형적·물리적 접근성과 실질적 접근성이다. 외형적 접근성은 경제주체가 얼마나 쉽게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며, 실질적 접근성은 경제주체가 정당한 가격에 합당한 품질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금융의 외형적 접근성은 세계적 수준이다. 특히 예금취급기관 지점, ATM, 신용규모 등 민간금융 상품에 대한 금융 접근성은 크게 성장하였다. 전국적으로 지점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우체국에서도 예금, 보험, 지급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도 손쉽게 가능하여 외형적 금융접근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정책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었다. 서민금융 확대 정책에 따라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나 기존의 고리 대출을 보증부 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여 서민들이 과중한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저신용·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의 성과는 지원실적으로도 확인된다. '07년 이전에는 민간복지사업자 위주로 1,500억원을 공급하는 데에 불과했으나, '08년 이후에는 서민공급의 공급채널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으로 다양화되며 11.4조원('13.6월 기준)의 서민금융을 공급하였다. 또한 바뀐드림론을 통해 1.84조원의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한편, 경기둔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에 대비한 선제적 신용회복 지원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도 서민금융 정책의 결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한계도 존재한다. 서민금융 자금의 공급측면에서는 자금공급과 자금배분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책금융 지원기관이 분산됨에 따라 기관간 조율과 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서민금융 공급이 어려웠다. 동시에 자금의 수요 측면에서는 복잡성과 비일관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양한 기관을 통해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함에 따라 지원기준이 각기 상이하고 수요자 측면에서 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편, 아직도 중금리대 서민금융상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 서민 금융기관이 서민들의 신용상태에 걸맞는 적합한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실질적 금융접근성을 높여 나가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고 있는 서민들의 부채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기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금융포용의 정책과제다.

나. 서민에 대한 안정적 금융확대

서민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금융재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서민금융은 자금을 일회성으로 공급하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 배분과 안정적 회수를 통해 시장원리에 따른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적 인 재원조달과 효율적 배분구조를 설계하여 서민금융이 장기·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조성하는 것이 서민금융의 핵심 정책원리이다.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다. 서민금융의 대표적 상품인 미소금융의 재원은 휴면예금과 기부금으로 조달된다. 그러나 최근 휴면예금의 범위에 대한 법적다툼이 있어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휴면예금의 범위를 재정립한 바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재원의 효율적 운용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혼란도 줄이고자 한다. 그동안 서민금융은 다양한 기관이 운영하고 있어 운영과 지원의 비효율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상품의 총괄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여 분절적 운용에 따른 중복지원 문제의 해소가 필요하다. 세 번째 과제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다. 일부 서민금융 프로그램은 자금배분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는 효율적 자금배분과 원활한 회수 구조를 설계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책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을 통한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서민금융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시중에 저금리와 고금리 신용상품은 존재하나, 중금리대 금융상품이 부족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금융 회사도 서민금융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신용정보의 공유 확대를 통해 적정금리 또는 중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상호금융 중앙회를 중심으로 서민금융에 적합한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서민 고객과의 접점확대를 통해 단순한 대출·연체·상환기록이 아닌 서민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관계형 금융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대부업체의 신용정보를 서민금융기관과 공유하여 신용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금리의 하락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서민에 대한 약탈적 대출을 예방해 나가는 것도 서민금융의 주요 과제다. 약탈적 대출이란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신용자, 저소득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거나 담보자산만을 회수하여 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출을 말한다.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이자 상한을 정하여 금융회사 등의 지나친 금리수취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4월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 상한을 연 39%에서 34.9%로 인하한 바 있다.

또한 이자제한법의 상한금리도 연 30%에서 25%로 인하된다. 일부에서는 금리 상한 인하로 인해 오히려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의 돈 빌리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저신용자, 저소득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더 많은 금리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어 본인의 신용보다 과도한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키는 것도 약탈적 대출방지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차주의 상환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담보회수에만 의존하여 과도한 대출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차주의 채무불이행을 야기하여 차주가 보유한 자산매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서민금융기관도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대출을 공급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다.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금융포용의 또 다른 정책과제는 과도한 채무를 조정하여 자활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이다. 신용회복은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의미가 있다. 즉, 자활 의지가 있는 서민들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시 경제활동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개인에게도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조정은 시장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일부 금융기관의 채무 조정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 가능성만 높이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발적인 채무조정 과정은 개별 금융기관의 자발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수인의 딜레마 구조와 흡사한 측면이 있다. 이에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사적 채무조정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시장 자발적인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신용회복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는 신용회복에 대한 절차에 대한 조력이 충분하지 못해 신용회복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 신용회복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신용회복의 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실질적 자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복위의 신용상담기능을 확충하여 서민층의 채무상담 및 재산형성 설계 지원 등 신용상담과 교육의 허브로 만들고자 한다. 서민금융 이용자와 연체자,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용상담 및 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률적으로 적용중인 채무 감면율에 채무자의 실질적 상환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감면율을 개선하고자 한다.

공적·사적 채무조정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신용회복의 주요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조정제도는 사적 채무조정과 법원의 결정에 의한 공적 채무조정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 공적 채무조정의 수준이 높아 최근 법원의 개인회생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공적 채

무조정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사법당국을 통한 결정이 필요하여 소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요시간과 비용이 적은 사적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주요 선진국이 운영중인 사전노력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파산신청전 신용상담의 의무화 등이 그 예라 하겠다. 또한 사적 채무조정으로 불충분한 채무자의 경우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반대로 법원이 사적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복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적·사적 채무조정 과정을 연계하는 것도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3. 마치며 : 한국 금융정책의 남겨진 과제들

앞으로의 금융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금융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사회의 피니스(finis)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산적해 있다.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금융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윌러의 주장은 우리 사회에도 적용된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해 국민들은 안정적 미래를 보장받아야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심화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날씨위험, 장수위험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보다 완벽한 시장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점증하고 있는 금융불안 요인, 경제 위협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금융의 IT화에 대응해 정보보안과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모든 문제들은 한국 금융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동시에 한국 금융정책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금융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한국 금융산업에 대한 일각의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우리나라 금융의 미래가 밝다고 믿는다. 더디었지만 우리의 금융제도는 점차 투명해졌고 금융시장은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금융정책도 항상 우리 금융산업을 앞뒤에서 조력하며 금융발전에 일조해 왔다. 다만 앞으로의 금융정책은 금융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학계, 이공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간의 연계가 강해짐에 따라 금융이외의 이론과 아이디어의 융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 금융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11.6.29.
- _____,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12.2.27.
- _____,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13.9.11.
- _____,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13.11.5.
- _____,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13.11.27.
- _____,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 '13.12.02.

_____,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 '14.1.23.

_____,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14.2.27.

_____, 금융규제 개혁방안, '14.7.10.